

미래토론

가

- 일시: 2008년 8월 20일(수) 오후 3~5시
- 장소: 미래전략연구원
- 사회: 이상현 연구위원(세종연구소)
- 참석: 김근식 연구위원(경남대 정치외교학과)
백승주 연구위원(한국국방연구원)
이강로 연구위원(전주대 사회과학부)

1. 가

Q. 이상현: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우리 외교안보정책이 난맥상에 빠져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금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잘못 되어 있을까.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참여 정부보다 못한 것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이제 현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되었다. 그간에 대한 평가부터 시작해보자.

A. 이강로: 외교의 기본 스탠스에 대해 보면 이명박 정부가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 외교의 목표는 소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가치를 내걸고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관계 복원, 다음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는데 이와 같은 목표들이 과연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현 정부가 이념이 아닌 실용을 강조했는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 자체가 이념이기 때문에 탈이념이 아니라 이전 정부와 다른 새로운 대안이념을 내세운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에 맞춰서 외교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A. 백승주: 우리 외교의 모습이 불만족스러운 것은 앞선 정부의 잘못도 일부 있겠지만 기본적

으로는 주변국의 스탠스 때문에 우리 외교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주변국의 스탠스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중국이 한미전략동맹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과 일본의 독도에 대한 기본입장을 미리 알고 대처했어야 했다. 기본적으로 한미관계가 중요했고, 세계적 차원의 변화, 동북아 정세 변화 차원에서 조정되어온 부분을 조금 소홀하게 봤기 때문에 우리 외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A. 김근식: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첫째, 백승주 박사께서 정확히 지적한 것처럼 외교는 내치와 달라서 다른 나라 파트너들과 여러 전략전술을 구사하는 것인데, 이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지나치게 우리의 희망이나 기대가 그대로 외교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굉장히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둘째, 외교의 대상으로서의 국제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세계질서, 동북아정세 그 안에서 남북관계와 향후 통일은 어떻게 이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상당히 짜임새 있는 블루프린트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명박 정부에 수미여일한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 세 번째, 자기 나름의 포지티브한 전략과 밑그림이 없었기 때문에 이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는 안티적인 접근이 강했다. 그러나 이런 접근법으로는 변화무쌍한 국제변동 속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쉽지 않다.

A. 이강로: 문민정부 이후, 급격한 세계화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국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것 같다. 정권이 바뀌어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국가이익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이상현: 지금 세 분 말씀 들어보니 문제점들은 거의 비슷하게 인식하고 계신 것 같다. 일단 이명박 정부가 전임정부에 비해 프로페셔널하다고 자칭해서 나왔는데 실상 의외로 준비가 덜 된 것 아닌가 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교안보에 대한 청사진도 조금 불투명하고, 상황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 또는 대응의 안이함, 그러면서도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 부각에 주목하다보니 결국 이 정부의 색깔과 방향이 무엇인지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이 현 정부 6개월에 대한 평가인 것 같다. 논의를 좀 더 진전시켜 보자. 과연 이명박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될까. 이 문제는 다들 어떻게 보시는지.

A. 이강로: 우선 무엇이 우리의 국가이익인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전제로, 지금까지 보여준 친미일변도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바꿔야 할 것 같다. 특히 미국의 차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복원이 지나치게 부시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로 부각되는 것을 탈피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깊이 검토해야 한다. 특히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남북관계다. 사실 남북문제는 국제정치적 요인과 민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교차하고 있는 문제로 여기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대목이다.

2.

A. 백승주: 외교안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현안에 매몰되어 있다는 점이다. 어떤 정부가 들어설 때 가지고 있었던 장기적 비전이 현안을 끌고 가야 하는데, 현안이 비전을 덮고 있는 현실이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건 우리 외교의 비전은 분단극복이 일차적이고 그 이후 안전을 담보 받는 외교망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 비전이 현안에 녹아드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한 가지 우리 정부에 권하고 싶은 이야기는 외교는 조금 겸손해도 된다는 것이다. 4대 주변강국과의 국력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눈앞에 놓여있는 분단문제, 통일문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수준으로 문제가 풀릴 수 있다. 물론 겸손하다는 것과 원칙을 지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원칙을 지키되 전체적으로는 부드럽고 겸손한 외교로서 국가의 핵심 이익을 지켜나가는 장기 비전이 현안 해결 때마다 빛을 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A. 김근식: 앞서 전략적 청사진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 정부가 내걸고 있는 것이 실용외교인데,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것이 선진일류국가라고 하는 국가비전 구현의 규범이지 외교의 슬로건은 아니다. 실용은 상당히 전술적 개념으로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략이 탄탄해야 하는데, 이러한 밑그림이 없다. 비교해보면 노무현 정부 때는 논란은 있었지만 동북아시아대구상이나 동북아균형자론 같은 문제의식이 있었다. 그것이 옳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도와 모색이 있었어야 하는 것이고 전략적 밑그림 하에서 실용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독도문제만 하더라도 전략적 밑그림 속에서 조용한 외교도, 단호한 대응도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그러한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러나 사실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뒤집어 이야기 하면 복잡한 상충가능한 영역들이 있다. 예컨대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간에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가 있다.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방중 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무례한 언행은 사실 지난 4월 캠프데이비드에서 합의한 한미간 전략동맹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또 생각해보야 할 것은 미국과 중국관계가 항상 갈등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협력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떠한 스탠스와 원칙을 가져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사람의 문제이다. 과거를 보면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는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브레인이 있었는데, 현재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는 신뢰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브레인이 없는 것 같다. 청와대가 전임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는 점에서 NSC나 안보실을 없앤 것도 중요한 문제다. 터져 나오는 현안에 대해 조정하고 일사분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어졌다. 사람도 없고 시스템도 없는 것이다. 사람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외교부 출신들이 외교안보라인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고, 남북관계 고유성이나 미묘한 한중관계

를 다루는데 있어서 집단적 사고(Group Thinking)의 문제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Q. 이상현: 사람의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 외교안보는 내치와 달라서 전략가와 실무자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는 외교부 관료출신들이 외교라인에 포진되어 있다. 현안에 쫓아가다 보면 전략을 구상할 시간이 없다. 현재 상황을 보면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실용외교 문제가 나왔는데 잠깐 평가해보자.

3. 가

A. 백승주: 지난 6월에 중국의 전략가들과 만나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두 가지 지적을 하더라. 우선 같은 한자 문화권인 중국은 실용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본다. 단기적인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가치동맹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가치, 자유주의 확산과 같은 외교기조가 가치동맹 내용에 들어 있다. 한미간의 가치동맹은 중국을 압박하여 중국의 정치체제를 바꾸려고 한다는 구상, 전략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에서 같은 정치적 가치를 갖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 호주와 함께 가치동맹을 맺어 중국을 포위하고 위협하려 한다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심을 해소해야 할 과제가 있다.

지난 5년간 외교정책을 추진했던 지난 정부와 6개월간 걸음마를 시작한 현 정부를 수평적으로 비교, 평가하긴 어렵다. 현 정부의 비전이 '성숙한 세계국가'이다. 이를 위해 세계사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와의 협력관계, 즉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발생하는 외교적 딜레마가 중국이나 러시아가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우선순위로 아시아 중시외교,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제시했는데 그래도 불만은 해소되지 않는 것 같다. 지난 정부에서도 '동북아균형자론'을 내놨을 때도 처음에 개념이 고착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듯 '성숙한 세계국가' 개념도 추진과정에서 다듬어지고 단단해질 것으로 본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주변국가의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주변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서는 정치한 외교적 수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Q. 이상현: 얼마 전 국내 중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한미관계를 전략동맹 관계라고 표현하는 것을 중국이 굉장히 못마땅해 한다고 한다. 그래서 한중간에도 전략적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제기했다는 의견이 많다. 한미관계는 이미 전략적 동맹관계인데 왜 전략적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있는가. 중국은 한미전략동맹이 결국 중국을 겨냥한 것에 대해 심기가 불편한 것이고, 또 미국 쪽에서는 한국

이 미국과의 전략동맹 외에 왜 중국과도 전략적 관계로 가는 것이냐 하는 불필요한 연쇄반응이 나온다. 외교란 것이 우리만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 상대국들의 반응을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정부의 외교 청사진과 관련하여 6개월은 확립된 전략이 나오기엔 조금 이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정부도 1년이 지나서야 전략적 개념들이 정립이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명박 정부도 인수위 시절이나 정권초기에 내놓는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된 것은 아닌 것 같다. 아마도 현실에 부딪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개념이 수정되고 정립이 될 텐데 이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시행착오를 줄이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A. 이강로: 문제제기 차원에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다. 이명박 정부가 외교정책상으로 체계적 세계관, 전략적 사고가 없다는 것은 동감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달리 전통적인 한미관계 회복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다. 결국 가치의 문제다. 이명박 정부가 외교적 시행착오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잘 다듬어서 내놓는다고 한다면, 기존의 두 정부와는 다른 새로운 가치관에 의한 보다 정교화된 외교전략 프로그램이 제시될 수도 있다. 결과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A. 김근식: 국정의 기조와 행동차원의 실용외교 간의 괴리가 심하다. ‘성숙한 세계국가’를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의 기조라고 볼 수 있는데 2008년 한국이 처해있는 상황에서 너무 앞서가는 비현실적 구호다. 성숙한 세계국가의 기본 문제의식은 세계적 보편규범과 보편가치를 앞장서서 이끌고 간다는 것이다. 지향점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나 이것을 지나치게 전면에 내세울 때 아직 여기에 도달하지 못한 국민국가로서의 분단문제, 남북간의 대치상태, 미중관계의 길항성, 한일관계의 잠복요인들에 대해 세밀한 접근이 어렵다. 연일 터져 나오는 외교적 현안에 대해 일관된 대응을 하기에는 공허한 이야기인 것이다.

A. 백승주: 이강로 교수께서 지적하신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전략적 포지션, 즉 한미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국가이익을 어렵게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이 부분은 현 정부가 갖고 있는 모티브라고 할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5년간의 대외정책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부분 위임되어 있는 거라고 본다. 앞으로 지켜봐야하겠지만 어떤 정부건 자신의 포지션을 세팅하면서 국가의 핵심이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하려는 동기를 갖고 있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좋지만 현 정부의 전략적 포지션 자체가 옳다, 그르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

A. 이강로: 이명박 정부의 친미정책을 모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지난 10년간의 국제정세변화, 남북관계변화에 대한 고려 없이 역사적 신뢰에 근거한 무조건적인 한미동맹 강화는 문제라고 본다. 사실 민주주의 체제에 의해 선출된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위임에 의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결과가 중국의 한미동맹 관계 폄하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

A. 백승주: 현 정부가 출범하는데 기여한 외교안보분야의 자문교수단이 있는데, 이들이 실제로 장기비전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 정책을 끌고 가는 위치에 있지 못하다. 외교전문가와 전략가가 조화롭게 구성되어야 하는데, 정권을 만들었던 전문가 그룹이 보이지 않는다. 자꾸 현안에 매몰되고 장기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진단과도 관련이 있다. 책임정치, 책임집행이란 차원에서 초기에 정책자문을 했던 전문가들이 좀 더 책임 있는 역할을 하면서 외교관료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이상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미가치동맹과 같이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외교나 정책은 가치를 전제로 하는 인간 활동의 일부라고 본다. 따라서 정부가 바뀔 때 정책이 바뀌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외교에 투영해보면 민주주의나 시장경제처럼 한국이 갖고 있는 가치가 있는데, 주변국 예를 들어 중국을 고려해서 가치의 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과연 상책인가.

A. 백승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일부러 감출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어떤 용어를 쓸 때 주변국이 예민해 있다면 공식적인 외교문건에 올리기 전에 상대국가를 충분히 이해시키는 노력과 과정이 필요하다. 가치동맹이라는 말에 중국이 예민해서는 우리가 덕 볼 것이 없다. 이해가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 갈 수도 있는데, 조금 서둘러서 주변국 외교를 끌어왔던 측면도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생길 것이다. 관련 국가들과 조율하는 과정과 노력들이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A. 이강로: 한미간 전략동맹, 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 차이를 알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구분이 잘 안되는 것 같다. 이런 개념도 정부가 확실하게 차별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어떻게 우리 국가의 이익으로 정제되고 다른 나라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러한 과정에서 좀 더 세련될 필요가 있다.

A. 김근식: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전략동맹의 내용을 보면 가치동맹, 평화구축동맹, 신뢰동맹으로 설명된다. 21세기 한미관계를 최고수준으로 높이자는 것이다. 유의할 점은 이러한 단어에 대해 한미간 이해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미간 전략동맹과 관련하여 중국을 깊이 염두에 두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고 흔들린 한미관계를 복원하는 쪽에 주목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에서 열렸던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전략동맹, 평화구축동맹이라는 시각의 연장선에서 아프간 파병요청을 한 바

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청와대 대변인은 논의한 바 없다고 즉각 부정하였다. 이처럼 한미동맹을 전략동맹으로 격상하는 데 있어서 치밀한 개념적인 접근과 조율이 있어야 한다.

A. 이강로: 이명박 정부가 지난 정부의 모든 것을 부정하려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다. 지난 10년 동안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여기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데, 모두 무시하려다보니 문제가 발생한다.

A. 백승주: 기본적으로 현 정부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취임했다. 총선에서의 안정적 의석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정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본 참모들이 대외정책의 차별화를 일정하게 강요한 측면이 있다. 한미간 전략동맹에 대한 충분히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캠프데이비드에서 공동선언문 발표가 아닌 공동기자회견으로 정리된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부시 정부 이후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번에 전략적 동맹과 관련하여 미래비전선언을 다음 정상회담으로 미룬 것은 참 잘한 선택이다. 더 다듬을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Q. 이상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미 FTA 문제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대북정책으로 넘어가자.

A. 김근식: 사실 한미FTA는 노무현 정부의 작품이다. 그러나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집착이 강한 것 같다. 그러나 비준을 위해 대응하는 자세는 전략적이지 못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이 비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비준하고 준비하자고 하는데, 쇠고기가 들어오는 현실과 우리가 먼저 해줬으니 미국이 앞으로 잘해줄 것이라는 기대 사이에는 등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미국 대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당분간 한미FTA 비준이 빨리 처리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므로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A. 백승주: 차분한 준비도 필요하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 부시행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비준 압박은 필요하다. 정상회담이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좋다. 차기 정부에 대한 압박도 되기 때문이다.

A. 이강로: 한미FTA와 관련하여 오바마 진영이 승리할 경우, 최소한 일부사안에 대한 재협상 등 다양한 카드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역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 연령 문제도 고려해볼만 하다.

Q. 이상현: 한미관계가 중요하고 한미전략동맹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레토릭상의 실수

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을 서두는 과정에서 쇠고기 문제가 터져 나왔고 한미전략동맹도 현실감 없는 개념으로 된 것 아닌가 한다. 이제 대북정책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 보자. ‘비핵개방3000’이 못매를 맞고 있는데.

4. 가

A. 이강로: ‘비핵개방3000’은 현재 우리의 역량으로는 북한에 강요하기 어려운 비현실적 목표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선거프로그램을 집권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데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또 금강산 피격사망 사건이 남북관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A. 김근식: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인 시도라고 본다. 현재 통일부의 정책을 보면 ‘비핵개방3000’이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그 수위가 많이 내려가 있다. 문제는 꼬여있는 남북관계를 푸는 적극적인 이니셔티브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자기결단이 필요하다.

A. 백승주: 노무현 정부 초기 대북송금특검에 비추어보면, 지금의 정부정책을 전적으로 ABR(Anything But 노무현)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간 대화가 막힌 것을 제외하고 남북간 교역이나 금강산 관광 등의 민간교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다. 따지고 보면 지난 정부 10년, 120개월 가운데 50개월 동안 정부간 대화가 없었다. 현 정부 6개월 중에 5개월간 대화가 없다는 것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 중요한 것은 민간교류가 지속되는 것이다.

A. 김근식: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대북정책을 완전히 뒤엎지 않았다고 해서 ABR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통일부 폐지시도만 하더라도 명백한 ABR의 근거 중 하나이다. 금강산피격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공동 진상조사보다는 명백한 사과와 함께 진상요구를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었다고 본다.

A. 백승주: 금강산 문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는 최소한의 것이다. 현재까지 군부나 북한당국의 공식적 반응이 없다는 점에서 추후 해결의 가능성은 있다. 정상국가에 대한 대응과 달리 북한에 대해서는 다른 접근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김근식 교수의 공동조사보다 진상규명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Q. 이상현: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금년까지는 풀릴 기미가 어려운 것 같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서고, 남북간의 끈끄러운 기억이 사라져 가면 새로운 기회가 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

안정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문제다. 이제 정리할 시간이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제언이 있으면 해달라.

5.

A. 이강로: 국제적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은 이미 정치, 경제적 차원에서 강국으로 부상했고 러시아 역시 힘에 의한 국제정치라는 흐름으로 다시 복귀하고 있다. 일본 역시 우파민족주의 성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교에 있어서 경제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장기적 관점의 외교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A. 김근식: 최근 6자회담이 주춤하고 있다. 북핵이 장기화되고 남북관계가 악화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가장 큰 정책적인 변화는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목표가 없어진 것이다.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는 역사적 의미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다. 한미동맹 강화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이 대한민국의 대외관계에서 외교적인 고립이나 편향성으로 나가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

A. 백승주: 외교안보정책을 다루는 사람은 멀티포커스 렌즈를 가져야 한다. 장기적 비전과 현안, 거시와 미시를 아울러 봐야 한다. 중장기 비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의제를 꾸려나가야 한다. 당장의 현안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Q. 이상현: 장시간 토론을 통해 많은 부분들을 살펴봤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철학의 문제, 인적구성의 문제도 지적되었다. 또 실용으로 대변되는 외적인 효율만 강조되고 정작 일할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정부가 잘 해나가기를 바라는 것은 참석자 모두의 공통된 바람인 것 같다. 함께 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린다. ■

:

<http://www.kifs.org>

39-1

704)100-813 /

(02)779-0711 /

(02)779-0718 /

kifs@kifs.org